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3 1 4 회 임 시 회
2 0 2 2 . 9 . 2 6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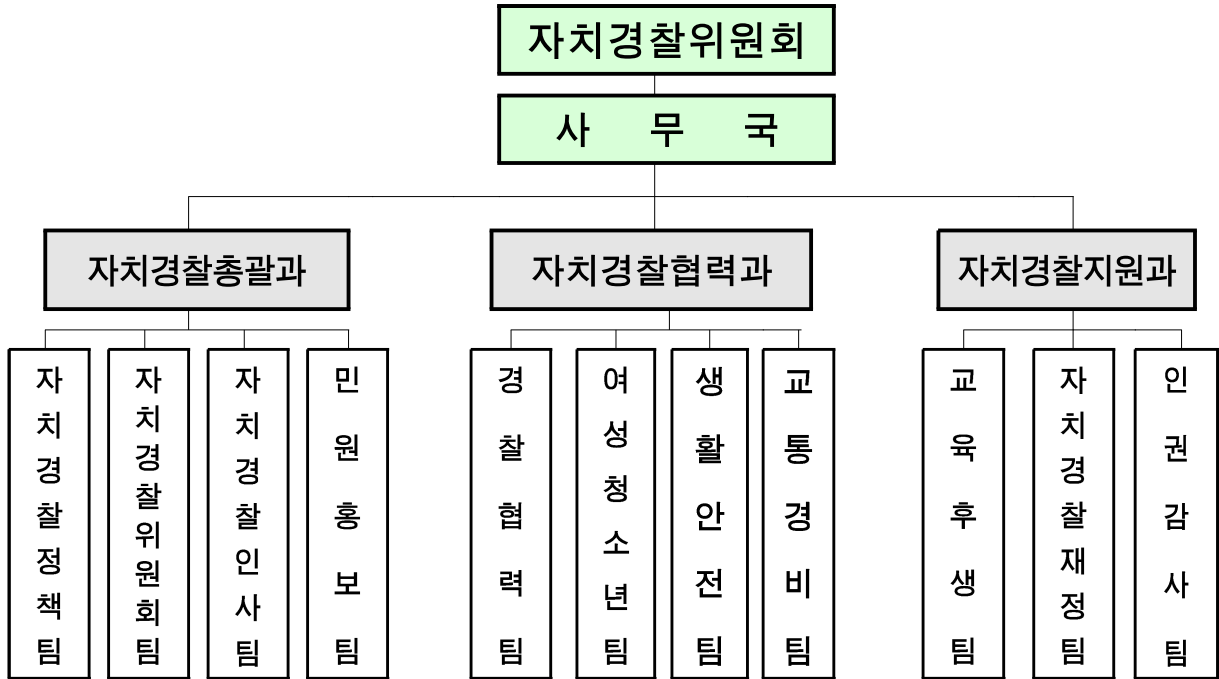
주요 현안업무보고

2022.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I. 일반 현황

조 직 1국, 3과, 11팀



인 력 43/59(정원/현원)

(’22. 8.31.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정무직	임기제	경찰관	관리운영직
계	43/59	38/39	2/2	0/0	3/18	0/0
자치경찰총괄과	22/26	18/19	2/2	0/0	2/5	0/0
자치경찰협력과	9/20	8/10	0/0	0/0	1/10	0/0
자치경찰지원과	12/13	12/10	0/0	0/0	0/3	0/0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파견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현원파견(정원외) : 15명(경정3, 경감1, 경위4, 경사3, 경장4)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자치경찰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국가경찰사무 협력조정)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생활안전, 다중운집행사 지도감독
자치경찰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방안 검토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사업예산 편성, 집행관리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예 산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위원회 사무국	185	20,046	19,861

- ▶ 자치경찰사무 이관 비용은 (약칭)경찰법 제34조에 따라 '국비부담원칙'임
- ▶ '22년 예산 20,046 백만원 : 국비 15,818 백만원, 시비 4,228 백만원

○ 부서별 예산 : 총 200억 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합 계	185	20,046	19,861
자치경찰총괄과	163	1,734	1,571
자치경찰협력과	12	937	925
자치경찰지원과	10	17,375	17,365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 위원 프로필

사진	성명	성별	주요경력
	김학배 (위원장)	남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사무국장)	남	- (前)서울중부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여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남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남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現)한국경찰학회 회장
	장전배	남	-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광주·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좌세준	남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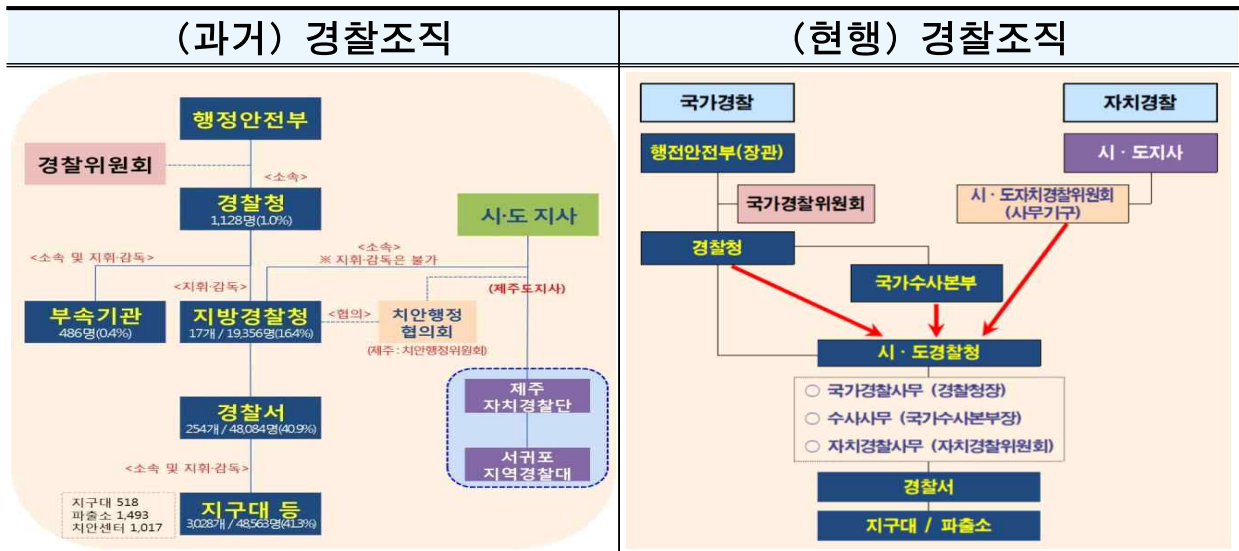
II. 자치경찰제 소개

일반적 의미의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은 국가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

자치경찰제 개요

-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조직 : 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위원장 정무직 1급)
 - 구성 : 7인 (시장 1, 위원추천위 2, 시의회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 1)
 - 주요역할 :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
 - 사무국 : 위원회 업무수행 (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직)
- 사무 : 생활안전(순찰, 여성·청소년 등), 교통, 지역경비(다중운집행사)
- 인사 : 경찰관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 일부(경정 이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자치경찰 사무

○ 근거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치경찰 사무

① 생활안전 분야

-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범활동지원, 재난·재해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교통 활동지원,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③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경찰사무 구분



○ 서울시 주요 자치경찰사무 (조례 별표1)

	자치경찰사무(법률)	구체적인 수행사무 및 범위(조례)
생활 안전	1) 순찰 및 시설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범죄예방 순찰 등
	2)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지도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협업·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재난우려·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해당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아동·청소년·노인 등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학교폭력 대응,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지원, 학대예방인력 운영 등
	5)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단, 지자체 사무 제외)	경범죄 위반 단속, 기초질서 확립 홍보, 풍속업·사행행위 단속, 성매매 단속·예방
	6) 그 밖의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생활안전 관련 112 신고처리, 지하철경찰대, 한강경찰대, 관광경찰대, 유실물·분실물 관리, 응급구조대상자 지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지원
교통 활동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신고처리, 음주단속장비 관리
	2) 교통안전시설·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교통안전활동 홍보 등
	5)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안전기준 초과차량 허가처리, 도로공사·점용허가 조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관리 등
	6) 그 밖의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 112 신고처리, 운전면허 발급·갱신 등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책 관리,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경비	다중운집행사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및 안전활동 지원

Ⅲ. 정책 목표

추진방향

- 1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집중 추진
- 2 인사권 등 적극적 사무 수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3 시민의 정책참여 강화 및 민간단체·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비전체계

비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

핵심
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치안
개선대책 추진

시민참여 및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자치경찰사무
합리적 운영 및
적극적 홍보 추진

추진
과제

- 1. 시민맞춤형 치안대책 추진
- 2.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보호
- 3. 학대 피해아동 지원
- 4. 교통사고 감소대책
- 5. 5030 탄력운영 확대

- 1. 1주년 행사 개최 및 제도개선
- 2. 반려견 순찰대 추진
- 3. 시도 자경위와 협력체계 강화
- 4.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
- 5. 단체·기관간 협업

- 1. 자치경찰 교육 및 후생복지 지원
- 2. 실질적 임용권 행사
- 3. 적극적·전략적 홍보
- 4. 원활한 재정관리
- 5. 인권 자치경찰 추진
- 6. 자치경찰 감사 운영

IV.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 일상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 추진

- ① 시민의 일상생활 속 체감 치안 구현
- ②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
- ③ '22년 하반기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 ④ 안전속도 5030 탄력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⑤ 추석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활동 추진

2. 시민 참여·협력을 통한 지역치안체계 확립

- ①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 ②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
- ③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 ④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 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서울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3.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 ①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후생복지·교육 지원
- ②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치경찰 인사 운영
- ③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 ④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 ⑤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감사 추진

1. 일상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 추진

① 시민의 일상생활 속 체감 치안 구현

②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

③ '22년 하반기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④ 안전속도 5030 탄력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⑤ 추석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활동 추진

1 시민의 일상생활 속 체감치안 구현

정신질환자 범죄예방 및 지하철·한강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대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고위험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응급상황에 적시·적절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지하철·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및 경찰활동 지원

□ 추진내용

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정신응급대응 추진

-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를 위한 **지자체·경찰 합동 정신응급대응시스템** 구축
 - 경찰과 市 정신건강전문요원 합동근무, 의료기관 연계 및 취약시간 현장조치 전담
 - ▶ 인원/장소 : 경찰 12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22명(총 34명) / 관광경찰대 신축청사(10월 준공) 4층
 - (평일 주간) 지역경찰과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장출동하여 보호·진단
 - ▶ 필요시 합동응급대응팀 병상정보를 안내 받아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
 - (야간·휴일) 합동응급대응팀이 현장출동하여 대상자(고위험 정신질환자 등) 인수, 의료기관 이송
 - ▶ 지역경찰은 합동응급대응팀 도착시까지 대상자 보호, 인계 즉시 일상업무 복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구성〉



○ 추진내용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 ☎2133-9831	생활안전팀장 : 이용길 ☎9847	담당 : 박상현 ☎9851
			담당 : 성진경 ☎9849
			담당 : 조광재 ☎9848

- 서울시·서울경찰청·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간 구체적 방안 협의(4~7월)
 - ▶ 인력, 시설, 기관별 역할, 출동범위, 이송체계, 근무지침 등 협의 완료
 - ▶ 사무공간(관광경찰대 4층) 인테리어 및 차량·집기류 서울시 예산지원
- 합동응급대응팀 요청 시 119(서울소방재난본부)구급차로 의료기관 이송 협의(7월)
- 1차 이송 의료기관 지정 협의 : 정신응급의료센터 2개소*(7월)
 - *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병상 부족 등 필요 시 2차 배후병원 이송)
- 인력선발 및 합동응급대응팀 근무자 전문교육 등 실시(9월)

②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휴식을 위한 지하철·한강 범죄예방 활동 지원

○ 지하철경찰대-서울교통공사 간 합동 근무 실시(7월~)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하철경찰대-지하철보안관 합동근무 재개
- 강남역·사당역 등 범죄 다발 및 환승·혼잡역사 중심 10개 역사
- 혼잡시간대 1일 2회(07:30~08:30, 17:00~18:00) 합동 근무

○ 한강공원 안전강화를 위한 치안지도 제작

- (배경) 경찰의 신속한 출동 조치를 위해 한강공원 내 차량·자전거 진·출입로 동선, 안내센터 비상연락망 등 정보 필요
- (배포대상) 서울경찰청 및 한강 관할 지구대·파출소, 한강공원 안내센터
- (예산) 20백만원
- (일정) 현장 경찰관서 대상 의견수렴(6.21.) 및 치안지도 제작 추진(10월 완료예정)
 - ※ 한강공원 치안 유관기관(한강사업본부, 서울경찰청) 의견 先수렴



□ 향후계획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및 업무 시행 : ’22. 10월
- 한강공원 치안지도 제작·배포 : ’22. 11월 초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

하계방학 및 신학기에 대비, 지역별 실정에 맞는 범죄·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청소년 범죄요인 차단을 위해 방학 및 신학기 기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적극적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 **하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추진(7.20.~8.19.)
 - 31개 경찰서 청소년 주요 활동구역(학원가·PC방·공원 등), 비행다발구역 순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 31개 경찰서별 청소년 대상 금연강의, 민·官·警 유해업소 합동점검, 비행 예방 캠페인 추진
 - ▶ 청소년보호법 위반 72명 검거, 유해업소 점검(207회), 캠페인·순찰(118회 등)
 - 지역별 실정에 맞춰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경찰서별 다각적 활동 추진
 - ▶ 지역사회(학원가연합회 등)와 협업, 학원폭력예방을 위해 정보공유 및 학원가 합동 순찰 실시
- **22년 하반기 신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기간 운영**(8.22.~11.18.)
 - 청소년 마약류·도박범죄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예방·치유활동 등 강화
 - ▶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해 중독성 예방교육 실시 및 치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적극 연계
 - 서울경찰청-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MOU(4. 6.) : 상담연계 및 교육자료 제작 등
 - 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MOU(8. 4.) : 예방교육 및 치료·상담 연계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및 SNS상 모니터링 강화

□ 향후계획

- 하반기 신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지속 추진 : ~ '22. 11월

작성 자 | 자치경찰협력과장:최은정 ☎2133-9831 | 여성청소년팀장:김경진 ☎9837 | 최현희 ☎9839

3 '22년 하반기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 안전활동,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재정비 등 선제적 성범죄 예방 활동 추진

□ 추진방향

- 신학기 초 성범죄 발생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 경찰-대학 간 협업을 통한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내 안전활동 전개
※ '22년 하반기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계획(9.5.~23.) - 제53차 위원회 심의·의결

□ 추진내용

- 대학 등 **학교주변 치안 점검 및 개선**
 - 대학가 관할 경찰서* 주관, 캠퍼스·원룸촌 주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 점검
*서대문·혜화 등 24개 경찰서
 - 합동점검단(경찰서·자치구·학교) 구성, 교내·외 불법카메라 점검 및 개선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디지털성범죄 예방 영상, 각종 신고센터*를 활용한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시 교육청 운영 온라인 상담센터('스쿨위드유), 경찰청 운영 비대면 성범죄상담 챗봇 서비스
- **경찰-대학 간 협업을 통한 캠퍼스 내 교육·홍보활동**
 - 학교 총무팀·총학생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업기반 마련
 - 교내 특강 등을 개설하여 경찰관 강사가 교직원·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 피해자(신고자)가 교사·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2차피해 여부 지속 확인
 - 조사 시 피해자의 심리적·물리적 안정 지원 방안* 적극 안내
* ▲상담센터(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상담전화 등) ▲야간 조사 시 '안심귀가서비스' 안내

□ 향후계획

-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및 우수사례·시책 발굴·공유 : '22. 10월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최은정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김경진 ☎9837 담당: 김예지 ☎9841

4 안전속도 5030 탄력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 의견과 과학적 통계(교통사고, 통행속도 등) 분석을 기반으로 제한 속도 및 신호운행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

□ 추진방향

-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서울 교통환경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탄력적 자치행정 구현
-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소통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도로 구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속도 5030 탄력 운영(50→60km/h)」 확대
 - (1차)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21.4.) 이후 지속되는 시민요구를 반영, 20개 도로 제한속도 상향(50→60km/h) 조정('21.10.~'22.5.)
 - ※ 대상(L=26.9km): 서강대교, 월드컵대교 등 한강교량(17) 및 현릉로 등 일반도로(3)
 - (2차) 시경계 인접구간, 녹지·하천·철도부지 주변, 자동차전용도로 해체지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한속도 상향 추진('22.4.~ 11월 / 24개소 시설개선 중)
- 상습 지·정체 구간의 시민 교통불편 경감을 위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없이 교통신호 시간 조정만으로 지·정체 경감이 가능한 지점을 발굴하여 신속한 시민 교통불편 해소 추진(공덕오거리, 광장사거리 등 70개소)
 - 최근 3년간('19~'21) 평균통행속도 및 교통사고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습 지·정체 분석 등을 통해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 향후계획

- 안전속도 5030 탄력운영 2차 사업 완료 : '22.11월 말
-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 '22.12월 말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 ☎2133-9831 교통경비팀장 : 김영준 ☎9842 담당 : 서동희 ☎9846

5 추석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활동 추진

추석을 맞이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치안대책을 추진

□ 추진방향

- 연휴기간 치안공백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편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아동 등 치안 약자에 대한 보호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22년 추석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9.2.~12.) - 제51차 위원회 심의·의결

□ 추진내용

- 선제적 취약요소 점검 활동으로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
 - 범죄예방진단팀(CPO) 중심, 명절 주요 범죄 취약지점 범죄예방진단
 - ※ 대 상 : 1,282개소(금융기관 209, 귀금속점 248, 편의점 463, 기타 362) 대상
 - 1인가구밀집지역·무인점포·전통시장 대상 순찰강화, 방범시설 점검, 범죄예방교육 등 실시
-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우려 대상 모니터링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및 신고·입건된 아동학대 사건 모니터링
 - ▶ (대 상) 최근 1개월간 접수된 재발우려 사건 및 2회 이상 접수된 학대 신고 사건 3,698건
 - ▶ (후속조치)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시, 노원, 동남권 등 9개소) 등과 협업을 통한 조치·지원
- 전통시장 및 귀성·귀경길 등 혼잡지역 특별 교통관리
 - 혼잡예상지(대형마트·기차역·터미널 주변 등 총 246개소) 집중 경력배치, 소통 위주 교통관리
 - 전통시장(95개) 주변 주·정차 허용, 이용객 편의증진 도모(9.1.~12.)



□ 향후계획

- 추진결과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22. 9월말

작 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최은정 ☎2133-9831 경찰협력팀장 : 전영식 ☎9832 담당 : 송미현 ☎9833



2. 시민참여 · 협력을 통한 지역치안체계 확립

- ①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 ②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
- ③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 ④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 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서울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1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반려견 산책에 순찰을 접목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확대 추진하여 우리동네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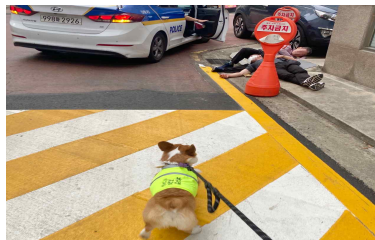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순찰활동을 접목
- 주요역할 :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산책 중 위험요소 등 발견시 신고조치**
 - 범죄 위험요소 확인, 방범 시설물 파손, 생활불편사항 발견시 신고(112,120)
- 활동지원 : 순찰대의 안전한 산책 및 순찰활동을 위한 **보험·물품 등 지원**
 - 반려문화 조성·사고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상해보험가입, 순찰대 조끼 등 제공

□ 추진내용

1 시범운영(강동구)

- 위원회-강동구-강동경찰서-(사)유기견없는도시 4자간 **업무협약 체결**(4.18)
 - ※ (사)유기견없는도시 : 전국최초 반려동물 문화교실 진행 등 강동구 협업 사단법인
- **순찰대 발대식 및 현장 순찰 실습**(5. 2.)
 - 112·120 등 신고요령 교육 및 관내 현장순찰 실시
- **순찰대 활동일지 715건 작성, 112 신고 8건, 120 신고 120건**(5. 2.~6.30.)
 - 중앙분리대 파손·가로등 고장 등 생활불편사항, 도로누움·주취자 등 신고조치
-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5.10) 및 KBS 7시뉴스(6.28) 등 **다수 언론매체 보도**



2 확대운영(9개 자치구)

- 기존 강동구를 포함하여 확대운영 희망 9개 자치구 선정(7월)
 - 9개 자치구 : 강동, 송파, 서초, 금천, 강서,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
- 자치구별 심사를 거쳐 총 순찰대 286개팀 선발 및 발대식 개최(8~9월)
 - 심사항목 : 리드워킹(따라걷기), 보호자 명령어 이행, 외부자극 반응대처 등
 - 발 대 식 : 8.13.(강동구), 8.27.(강서구, 서대문구, 마포구), 9.3.(동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9. 4.(송파구, 서초구)



선발심사(서대문구)



리드워킹 평가



발대식 개최(송파구)

- 위기청소년 정서적 지원을 위한 '내일을 같이(가치) 동행' 프로그램 운영(10월)
 - 대 상 : 송파구 공동체가정 아동·청소년
 - 내 용 :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지원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연계한 동물매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일을 같이 동행'교육 과정(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반갑게 인사해요 (기본예절)	▶ 심장소리 듣기 (생명존중)	▶ 함께 산책해요 (책임감,협동)	▶ 간식 만들기 (공감)	▶ 친구야! 고마워 (추억 간직하기)

□ 향후 계획

- 반려견 순찰대 운영활동 평가 : '22. 12월

2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 및 시·도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치안개선을 위하여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추진방향

-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상호교류 및 협업으로 자치경찰제도 개선 추진
- 우수사례 상호 공유를 통한 치안정책 확산 시행으로 치안서비스 질 제고

□ 추진개요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한 전국단위 자치경찰 연대 추진
 - 자치경찰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등 전국적 연대를 통한 공동과제 대응
 -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21.8월 25일 설립(2기 회장 : 서울 위원장), 총 11회 개최
- **‘전국 시·도사무국장 원탁회의’** 연계 추진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 위원회간 긴밀한 정보공유·협력을 위해 실무적인 하위단위 협력 프로세스 운용
 - ※ ‘전국 시·도사무국장 원탁회의’ : ’21.12월 9일 설립(회장 : 서울 사무국장), 총 8회 개최

※ 주요 추진실적(’22)

- ▶ 제20대 대선 자치경찰제 관련 공약 채택 건의 기자회견(’22.2.10.(목), 한국프레스센터)
 - ①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 인사권 강화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자경위 기능 실질화
 - ③ 현 일원화 모델로 인한 문제점 근본해결을 위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도입
- ▶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22.6.22.(수), 서울시청 간담회장 1)
 - 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현실화, ②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 ③ 지구대·파출소 직제 환원, ④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⑤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
 - ⑥ 자치경찰사무 명확화, ⑦ 안정적 재원 마련 등
- ▶ 제11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22.9.1.(목), 제주 오리엔탈 호텔)
 - 제주 자치경찰 정책포럼과 연계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 위원회별 수범사례 공유

□ 향후계획

- 제12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 ’22. 10.17.
-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전국 시·도사무국장 원탁회의’ 개최 : 매월 1회

3 시민의 치안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치안시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치안개선 유도

□ 운영개요

- 단 체 명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 출범일 : 2021.11.5.주
- 구성인원 : 333명(31개 경찰서 추천 277, 기타 희망 56명) ※ 활동방식 : 무보수 자율참여
- 주요역할 :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 정기 발굴 및 건의, 자치경찰 홍보 등

□ 추진내용

- 시민정책자문단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체제 구성 (9월)
 - 권역별 조직체계 구성 : 7개 권역 위원장이 총괄 관리, 캠페인 등 지역중심 활동 수행
 - ▶ 7개 권역 : 도심권, 영등포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강남권, 북부권
 - 정책 분과위원회 신설 : 주제별 정책자문역할을 수행하는 4개 분과위 신설
 - ▶ 4개 분과위 :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인프라, 제도개선
- 치안정책 기획·추진과정에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제안활성화 방안 추진
 - 시민정책자문단 대상 자치경찰 정책공모전 (8~9월)
 - ▶ 공모주제 : 자치경찰 내부청렴도 및 서울시 치안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 정책개발 TF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자문단 의견 수렴 및 결과 공유
 - ▶ 정책개발 TF주제 예시 : 기사·승객이 안전한 택시만들기, 이륜차 소음 규제방안 등
- 시민정책자문단 현장합동방문 실시 (10월 중)
 - 추진방법 : 자문단 대상으로 현장 치안개선사항을 공모하여 권역별로 현장방문
 - ▶ 대상지(예) : 병목현상·상습정체구간 도로, 안심보행이 어려운 골목 등

□ 향후계획

- '시민정책자문단' 우수활동자 표창수여 : '22.12월

4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별·테마별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신속 추진

□ 추진방향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업대책 추진
 - ※ 서울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 218명⁽²⁰⁾ → 240명⁽²¹⁾
- 교통사고 현황 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 추진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 추진내용

① 교통사고 감소대책 전담조직(TFT) 운영

○ 운영개요

- 구 성 : 자치경찰위원회, 도시교통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사고다발 자치구·경찰서(송파, 강서, 영등포, 구로, 동대문)
- 운영내용 : 기관별 교통사고 감소대책 공유·제안, 맞춤형 교통정책 협업 추진, 교통사망사고 현장 개선안 공동 논의
- 운영방법 :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추진내용

- TF회의 분기별 정례화 및 자치구·경찰서 구성 확대, 송파구 사고개선 논의(3.18.)
- 강서구(서부혈액원, 강서보건소) 합동 현장점검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4.25.)
- 구로구(가리봉철도고가차도, 구로C), 영등포구(도림사거리, 셋강역 인근) 현장 개선 논의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8.31.)



〈강서구 합동 현장점검〉



〈제3차 TF 회의 현장〉

②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1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243명) 중 고령자가 42.3%(103명) 차지
- 사업기간 : '22. 5.~11월
- 사업내용 : 고령자(운전자·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 소요예산 : 220백만원(제작 20백만원, 송출 200백만원)

○ 추진내용

-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 시나리오 기획 및 작성(5월~7월)
- 영상 촬영·편집, 성별영향평가 및 홍보물·영상물 심의(7월~8월)
- 고령자 교통안전 공익광고 송출(방송사, 전광판 등, 9월)

< 공익광고 제작 개요 >

▶ 주요내용

- 교통사망사고 중 24%가 노인운전자 사고이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 보행자가 59% 차지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경각심 고취
- '운전할 때 집중, 보행신호가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에 보행' 하자는 메시지 등 전달

- ▶ 영상분량 : 영상 1편 (40초 영상: 유튜브 게시, 30초 영상: TV 송출, 20초 영상: 전광판 송출)



□ 향후계획

- 제4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TF」 회의 개최 : '22. 11월

5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서울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홍보 인프라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책홍보와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및 친밀감 제고

□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대시민 인지도 제고
-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수행자로서의 자치경찰 이미지 구축

□ 추진내용

- '22년 제1차 '생활밀착 치안정책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 개최('22.1.~2.)
 - 3개 분야(생활안전·교통안전·사회적 약자 보호) 283건 응모, 24개 선정
 - 선정 아이디어는 지역 치안문제 해결 및 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수립에 활용
-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축('22.4.)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독립된 형태로 재구축하여 시민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위원회 슬로건 제작('22.6.)
 - 슬로건명 :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자치경찰제 1주년 기념 시민참여 '모바일 이벤트' 실시('22.7.)
 - 자치경찰 활동상을 주제로 16종의 이모티콘 제작·배포
 - 헬스케어 앱(App) '캐시워크(돈 버는 퀴즈)' 활용, 시민참여형 퀴즈 이벤트 진행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시책 홍보 강화('22.1.~8.)
 - 적극적 보도자료 제공으로(36건) 언론 노출(745건) 극대화 추진
 -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리플릿·동영상 등) 제작

□ 향후계획

- 하반기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 '22. 9.~10월
- '당근마켓'을 활용한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지역 환경개선 홍보 : '22.10.~11월

3.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 ①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후생복지·교육 지원
- ②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치경찰 인사 운영
- ③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 ④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 ⑤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감사 추진

1

치안협업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후생복지·교육 지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의 인적동력 확보와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 운영 체계 확립**
- 市 직원-자치경찰 간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후생복지 지원 연차별 확대

□ 추진내용

- 자치경찰 **근무 애로사항 청취** 및 **노후관서 현장 실사** (계속)
 - 삼각지 파출소 등 6개 지구대·파출소 현장방문, 정부협력으로 보수 등 필요 노후시설 개선 추진
- 자치경찰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市직원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22.2월~)
 - 자치경찰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총 3회)
 - 市 인재개발원 5·6급 대상 자치경찰 과목 강의 시행(총 3회)
- ’22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22.4월~)
 - 시 직원(6편), 자치경찰(6편) e-러닝 콘텐츠 내용 설계 및 제작 진행 중
 - ※ 자치경찰의 이해와 사무, 서울 자치경찰 주요정책 및 성과, 자치경찰과 인권 등
- 서울청(서)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22.5월~)
 - 1인당 연간 50만원 지원, 운영시스템 개선, 지원대상 선정, 세부 운영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자치경찰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과정 개설·운영 : ’22. 9.~12월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운영 및 근무현장 실사 : 계속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 : 최낙현☎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9855 담당 : 구혜림☎9857
김철묵☎9858

2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자치경찰 인사 운영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실질적 임용권 행사 체계를 구축

□ 추진방향

- 일선의 인사 고충을 적극 청취,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사행정 추진
- 현장경찰과 함께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소통 활성화 및 위원회의 위상 확립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22. 3월 구성, 각 2회 운영)
 - (인사위) 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인사행정 방침기준 및 기본계획 등을 의결(수시)
 - (고충위)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직무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을 심사(수시)
 -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소통마당 內 온라인 창구 마련 完 ('22. 9. 5.)
- 자치경찰 **유공경찰에 대한 적극적 포상**으로 현장 활력제고
 - 위원회 명의 표창을 자치경찰 유공자들에게 수여,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 추진
 - ※ 자치경찰 분야 유공 경찰관 1,848명 표창(1~7월)
- **실질적 인사 운영**을 위한 자치경찰 인사제도 개선(계속)
 - 인사법령 개정 및 인사규정 개선을 위한 국회·경찰청·서울경찰청 건의·협의 지속추진
 - ▶ (법령) ① 위임된 승진임용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
 - ②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임용권한 시·도 위임 등
 - ▶ (서울경찰청 협의) 경정급 전보 시 복수 추천의 실질화, 특별승진 시 자경추 의견 반영 등

□ 향후계획

-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22. 9. ~ 12월(수시)

3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체계 등을 정비·적용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회계 책임 명확화
- 자치경찰공무원 이용 회계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추진내용

- 서울시-서울경찰청(서) 간 예산 집행·물품 관리 체계 정립 추진
 -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경찰공무원 회계관직 임명(2월)
 - ▶ 서울경찰청(서)에 재무관 등 회계관직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324명(8월말 기준)
 - 자치경찰사무 회계 및 물품관리를 뒷받침하는 市 규칙 정비(5월)
 - ▶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협의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 관리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운영 기반 예산 재배정 추진
 - ▶ 서울경찰청(서)로 국비 분기별 재배정 추진(15,191백만원 중 12,562백만원, 8월말 기준)
 - 서울경찰청(서)의 재배정 예산 월별 집행점검 및 지원
- 경찰공무원 대상 예산·회계 업무의 안정적 이용 환경 제공
 - 예산 및 물품, 일반사용자 대상 e-호조 등 주기적인 교육 실시(6회, 440명)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등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 (인사발령사항 반영)

□ 향후계획

- 자치경찰사무 물품관리 기준 및 지침 마련 : '22. 9월
- 국비 재배정 추진(재배정 잔액 2,635백만원) : '22. 9월
- 경찰공무원 e-호조 사용자 관리 및 교육 실시 : '22. 9.~12월

4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자치경찰 시책 수립·시행

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인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자치경찰 인권 시책 발굴 및 사전·사후 점검 제도 운영
- 자치경찰사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 제고

□ 추진내용

- 내·외부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자치경찰 **인권 보호 체계 마련**
 - 위원회 사무국 직원 대상 인권 실천 추진단 구성(1월, 운영회의 및 현장방문 6회)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 구성(4월, 자문위원 12명, 자문회의 2회)
 - 위원회 자체 규정 및 중점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추진
 -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마련(7월)
 - 인권보호 으뜸 경찰관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매월)
 - ▶ 서울경찰청(각 경찰관서) 추천 및 위원회 감사 실시를 통한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 자치경찰 내 **인권 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 자치경찰 e-러닝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작(4월~)
 - 동료 인권강사 3명 선발(4월)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
 - ▶ 경찰서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3회)
 - 인권 시책 추진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인권 소식지 발간(6월)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권 학교 운영 : '22. 9.~12월
- 인권보호 자문단 및 인권 실천 추진단 운영 : '22. 9.~12월
- 인권 소식지 및 으뜸 인권 보호 사례집 제작 : '22.10월

5 효율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위한 감사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정책 이행점검과 현장 의견수렴,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감사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주요시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 중복감사 방지 등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한 서울경찰청 합동 감사 추진

□ 추진내용

- 10개 경찰서 대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현장 이행실태 점검('22.3.~)
 - 감사대상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시책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

감사 완료		감사 예정	
▪ 성북(3월)	▪ 서부(4월)	▪ 혜화(9월)	▪ 영등포(10월)
▪ 중랑(5월)	▪ 강동(6월)	▪ 관악(11월)	▪ 용산(12월)
▪ 동작(7월)	▪ 마포(8월)		
▪ 한강·지하철 경찰대(4월, 특정감사)			

- 시민의 인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 포상(매월)
 - 인명구조, 여성·청소년 보호 등 기여가 큰 자치경찰 공무원 선발
 - ▶ 위원회 표창 77명('22.1~8월) / 서울시장 표창 17명 위원회 표창 18명('21.8~12월)
- 자치경찰 사무 수행 관련 현장 의견 적극 청취(수시)
 -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의 불합리·비효율적인 요인 개선

□ 향후계획

- 서울혜화경찰서 등 4개 경찰서 대상 종합감사 운영 : '22. 9월~
-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경찰 공무원 포상 : 계속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5	11	4	-	-
	시정· 처리요구사항	5	5	0	-	-
	건의 사항	10	6	4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경찰 유관 사무 기관 확대 및 협력 사업 발굴 요청(청소년 육성회 등)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간 MOU체결('21.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총 4가지 사항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상담 등 맞춤형 지원 및 우범지역 합동순찰 실시 등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 협력 ▶ 학교폭력 및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 한국청소년육성회 간부진과의 간담회 개최('22.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 육성회(총재, 사무총장 등), 위원회(위원장, 국장 등) - 기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 및 협력활성화 - 청소년 문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선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캠페인 선도·보호 활동시, 경찰서-지구회 간 적극 협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등 실질적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22.12월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시 유관부서 등 연계 활성화 - '위기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31개 지구회 간 협의로 지역별 취약요소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22.12월 限)
<p>○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필요. 다른 광역단체 들은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 수도 서울답게 선진적으로 운영해 주기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홈페이지가 市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었으나('21.8.), 시민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분리된 독립형 홈페이지를 재구축(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담당관 협업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22. 1~2.) - 기존 홈페이지 데이터 자료 이관 및 콘텐츠 강화('22. 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형 홈페이지 오픈 및 운영('22. 4.~) ▶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바로 검색 가능 ▶ 주요내용 : 자치경찰제 및 주요정책 소개, 위원회 새소식알림, 소통마당(시민정책제안 등)
<p>○ 파견경찰 수당·복지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경찰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경찰관 복지강화 방안 검토('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직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가독서제 운영 ○ 파견 경찰, 사가독서제 시행('22.2.3~) ○ 파견 경찰, 시 직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2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파견 경찰 22명 대상, 인당 110만원 지원 실시
<p>○ 경찰청·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제도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권한이관 관련 협의('21.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운영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이 어려움 ※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 기존 서울경찰청 위주의 위원 인력풀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자치경찰협력과장) 포함('22. 4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제도 효과성·적절성 지속 개선
<p>○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홍보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개조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유발 1인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경찰서(남대문, 서초)를 통해 관련 내용 전달 ○ 과도한 소음 행위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 실시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범죄에 더 취약한 장소들을 적극 순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관리구역’ 재정비 ※ '22.1.10.~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증감,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 주민여론 등 항목별 적합성 검토 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심의를 거쳐 관리구역 재정비(지정·해제) ○ 주민 신청에 의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적극 시행 ※ 연중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을 원하는 시민이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청 시 시간·장소 및 112 분석, 우선순위·순찰주기 결정 후 순찰 ○ 22년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22.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구 수유3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2동
<p>○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모두 경찰 출신이지만 민생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단 점을 장점으로 살려주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장 및 경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위원회 안건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2년 위원회 회의 45회 개최, 191개 소관안전 심의·의결 ○ 또한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경찰행정 분야 전문성 보유 : 위원장, 사무국장, 장전배 위원 - 경찰학 분야 전문가(교수) : 김성태 위원, 이창한 위원 - 법률 전문가(변호사) : 권성연 위원, 좌세준 위원 - 인권 분야 전문가 : 사무국장(박사학위 보유), 좌세준 위원 (관련 강의 다수) ○ 특히, 위원회 내 각 업무별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자문회의체를 구성·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인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 인권(인권실천추진단·인권보호자문단), 정책개발(정책개발 TF, 홍보발전연구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17개 시도에서 복지후생비 천차만별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법적 검토 정비 필요함 (자치경찰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 협력·지원을 위한 경찰청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21.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콜로키움」 관련 개선 건의(’21.11.14) ○ 17개 시·도 후생복지 지원대상 및 범위 현황 조사(’22.8.3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제주 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구·경기 등 11개 시·도 지구대·파출소까지 지원 - 지원규모 : 평균 39만원/인(최저15만원~최대100만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경찰청과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 제도화 지속 협의: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체·사무국장원탁회의 등 공동 제안
<p>○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부과와 수입의 이전도 함께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와 안정적인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치경찰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예산 편성·집행 효율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자치분권위원회, ’2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자치경찰교부세’ 신설하여 세입 확충 및 ‘자치경찰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집행 자율성 확보 ○ 자치경찰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시도지사협의회, ’2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자치경찰교부세’ 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세원 확보 및 예산 편성·집행 자율성 보장 요청 ○ 자치경찰 자주재원 확보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건의(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2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 독립세원 지자체 이관 및 자치경찰교부세 세목 신설 요청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인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 이관(국가 → 시·도) 및 ‘자치경찰교부세’ 세목 신설 또는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근거 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시민참여, 구나 동 단위업무와 연계 공유하여 마련하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주간 「시민참여 캘리그래피 공모전」 개최('21.10.26.~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4편 작품 접수, 「서로 관심갖고 돌아보면 우리모두가 아이지킴이」 등 최종 14편의 우수작 선정 - 우수작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 ○ 아동학대 예방 등 매월 경찰서 자치경찰 우수시책 선정·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쏘경찰서 대상 경찰서자치구 협업 우수시책 선정 및 전파, 유공경찰관에게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22.3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책자문단(31개 경찰서 시민 333여명 활동 中), 동 단위 시민까지 아동학대 예방 시책 공유 및 의견 수렴
<p>○ 경찰사무의 이관으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적극적인 국비 요청 등 관련 규정 개정 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정부와 협의하여 세입확보방안 모색하기 바람 (자치경찰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 정책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예산 편성·집행 효율화(자치경찰교부세(가칭) 신설 및 자치경찰특별회계법 제정)를 위한 대정부 건의 (자치분권위원회, '21.9.3.) - 자치경찰교부세(가칭) 신설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시도지사협의회, '21.12.29.) - 자치경찰 자주재원 확보 관련(교통범칙금·과태료 등 독립세원 지자체 이관 및 자치경찰교부세(가칭) 세목 신설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의(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22.5.3.) ○ '23년 자치경찰사무 비용보전 방식 변경 (국고보조금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비지원액 상향 지속 건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인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 이관(국가 → 시·도) 및 '자치경찰교부세' 세목 신설 또는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근거 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자치경찰사무와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와 연관 또는 협력 사항 있는지 살피고 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대비하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와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 연관성 및 협력사항을 검토하여 합동단속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하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21.7.16.) - 서울시·자치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 강화 ('21.8.6.) ○ 향후에도, 시민밀착형 경찰활동과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협업하겠음
<p>○ 자치경찰위원회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은 초창기로 정체성과 특성이 경찰에 더 가까울 것 같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위상을 마련해 나가주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지휘, 경찰관 합동 근무 등으로 일부 경찰조직의 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시의회 심의 및 예산 편성 등 소속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1주년 행사 개최, 1주년 백서 발간,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서울 자치경찰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위원회 위상 강화에 노력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 1년간 53회 회의, 387개 안건 처리 ('21.6월~'22.9.6.)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활동 : 1주년 행사 개최(7.12), 1주년 백서 발간(7월), 사진전 개최(7.11~7.12) - 제도개선 건의 : 인수위원회 방문건의(4~6월, 3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정부 건의(2월 기자회견, 6월 공동건의문),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면담(7월), 인사혁신처장 면담(7월)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연중 수시)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 (연중 수시) ○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연중 수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편성 책임을 확고히 해주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예산 편성·집행 효율화를 위한 대정부(행안부, 경찰청, 자치분권위) 건의('21.8~12월, 총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교부세(가칭)' 신설하여 세입 확충 - '자치경찰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집행 자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및 '공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화 추구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 재배정 제도 마련하여 서울경찰청의 21개 경찰서 등 하급관서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권 확보 - '22년도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 '23년 市 자치경찰사무 보전금 재산정 요청('22년 152억, '23년 134억)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세원 마련 적극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 이관(국가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사무 이관(국가경찰 → 자치경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을 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세입으로 책정(서울지역 과태료·범칙금 연간 약 1,500억원) - (2안)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한 자원 마련(유사사례 : '소방안전특별교부세')
<p>○ 자치경찰사무에 좀 더 강한 지휘, 감독권의 개선방안 마련과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자치경찰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기관 : 행안부, 경찰청,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대선 자치경찰제 관련 공약채택 건의 기자회견(22.2.10.) ▶ 자치경찰권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22.6.22.)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경찰 정원화 건의('22.4월 2회, 비서실 이철규 총괄보좌역) ▶ 파견경찰서 관련 인사혁신처장 면담(22.7.15.)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 서울 위원장) 및 전국 시·도 사무국장 원탁회의(회장 : 서울사무국장) 등 시·도간 협력체계 추진중